

#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21 종교활동 강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의 母)  
피 해 자 □□□(▣▣▣▣중학교 ○학년 ○반 재학)  
피 신 청 인 ●●●(위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역사 담당)

## 주 문

###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은 피해자와 위 학교 ○학년 ○반부터 ○반까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 및 학습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해 신분상 처분으로 중징계할 것을 권고한다.

나. 또한, 학교장은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를 사전에 파악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중학교장에 대한 신분상처분으로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다. 다른 학교에서도, 종교를 가진 교사가 피신청인과 같은 행위를 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 2. ☐☐☐☐중학교장에게,

종교를 가진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사 개인의 자유와 학생들의 자유 및 권리를 구별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인권교육 포함)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이 유

##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5. 8.(금)

나. 신청인 : ○○○(피해자의 母)

다. 피해자 : ☐☐☐☐중학교 ○학년 ○반 재학)

라. 피신청인 : ●●●(위 학교 ○학년 ○반 담임교사, 역사 담당)

마. 구제신청요지

피신청인은 자신의 첫 수업시간에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고, 역사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부 과정을 생략하였으며, 특정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비방하였다.

피해자는 피신청인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믿는 종교를 이단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종교적 논쟁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조치를 원한다.

##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 가.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

위 구제신청요지와 같다.

###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2015. 3. 1.자로 위 학교에 발령을 받았고, ○학년 ○반부터 ○반까지 6학급의 역사 수업을 맡았는데, 처음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다.

2) 중학교 ○학년에 재학 중인 아이들의 시기를 생각해볼 때, 사람의 말보다는 기도로써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고, ㅁㅁㅁㅁㅁㅁ 말씀으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아이들의 영혼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3)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아프거나 다쳤다는 이유로 보건실에 가겠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보건실에 보냈을 때, 1시간 있다가 학생들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4) 역사수업을 하면서 특정 종교를 이단이라고 한 적은 없고, 원시

종교(인도정착-브라만교)가 인도의 토속신앙과 결합되어 있어 우리를 구원해줄 만한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며, 특별히 그러한 종교를 비방한 것은 아니다.

5)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고, 자연환경 역시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라는 증거가 많아,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학생들에게 말하였다. 교사로서 본인의 소신에 따르면, 진화론은 미개한 학문이므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6) 피해자가 ‘[인도정착] [브라만교]’를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어, 4월 초쯤 피해자를 불러, “그 [인도정착]는 이단이니 다른 좋은 [종교]들도 많으니 다른 [종교]를 다니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종교를 계속 주장하기에, 다음 날 성경을 보며 같이 이야기하기로 했다.

7) 다음날 피해자가 ‘[인도정착] [브라만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책 등을 가지고 와 같이 이야기했다. 해당 종교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맞다”고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8) 피해자와 2시간가량(16:40 ~ 18:30) 이야기를 하였으나 서로 의견이 계속 대립되어, 이단과 관련한 자료를 A4 용지 2장 정도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주고 같이 읽은 후, 그 날 대화를 끝냈다.

9) 교사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 등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서 인성을 지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축복기도 등을 한 것이지, 학생들에게 종교를 강요한 것은 아니다.

#### 다.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 ○학년 ○반(피신청인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34명
  - 1학기 첫 번째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기도를 했다.(25명)
  - 수업과 관련하여 타종교를 비판한다.(9명)
  -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다.(19명)
  - 아프다고 하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준다.(12명)
  - 학생들에게 전도를 한다.(16명)
  - 친구가 다니는 ■■■를 수업시간에 이단이라고 했다.(3명)
  - 자기 종교만 주장해서 기분이 나쁘다.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18명)
  
- 2) ○학년 ○반(피신청인이 수업 담당) 28명
  - 1학기 첫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기도를 했다.(16명)
  -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다.(4명)
  - 학생들에게 전도를 한다.(1명)
  - 자기 종교만 주장해서 기분이 나쁘다.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4명)

### 4. 인정사실 및 판단

#### 가. 인정사실

신청인, 피신청인의 주장 및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신청인은 2015학년도 ▣▣▣▣중학교(공립학교임) ○학년 ○반부터 ○반까지 총 6개 학급의 학생들에게 역사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2015. 3.초 위 학급의 첫 수업시간에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였다.

2) 피신청인은 위 학교 ○학년 ○반의 담임을 맡고 있는데, 위 학급의 학생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 학생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후 기도를 하고, 학생들을 보건실로 보냈다.

3) 피신청인은 2015학년도 1학기에 위 학교 ○학년 ○반부터 ○반까지 역사 수업을 하면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4) 피신청인은 2015. 4. 초, 피해자가 ‘▣▣▣▣ ▣▣▣’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교실에서 상담하면서 위 ▣▣▣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종교적 논쟁을 벌인 사실이 있다.

5) 피신청인은 기독교를 믿고 있고, 위 ‘▣▣▣▣ ▣▣▣’는 피신청인이 다니는 ▣▣▣가 소속된 교단과 다른 성경을 채택하고 있다.

## 나. 판단

### 1)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가)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16조는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의 내용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는데, 신앙의 자유는 ①어느 종교를 믿을 자유, ②종교를 믿지 않을 무종교의 자유와 ③신앙을 변경할 자유를 의미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①신앙고백의 자유, ②종교적 행사의 자유, ③종교교육의 자유, ④선교의 자유, ⑤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신앙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의 내심영역으로서 절대적 자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헌재 2010. 6. 24. 2010헌마41 결정)

종교교육의 자유에는 종교학교를 설립할 자유와 그러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시킬 자유가 포함되나,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政敎分離의 原則)에 따라 금지된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은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고 있는 규정이다.

나) 위 인정사실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교의식을 행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믿도록 권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 4)항과 관련하여 검토하면,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교사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에게 교사의 종교가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종교적 논쟁을 하

는 것은 학생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신청인이 어떤 종교를 믿을지는 피신청인의 신앙의 자유에 해당하고, 자신이 믿는 종교와 관련하여 종교적 행위를 할 자유도 인정된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기도를 하고, 아픈 학생들에게 기도를 한 행위는, 직무행위 중에 자신의 종교를 학생들에게 표현 내지 권유한 것으로서 교사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고, 심지어 학교에서 피해자와 종교의 차이에 따른 이단논쟁을 하였던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政敎分離의 原則)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와 다른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가) 「교육기본법」 제14조 및 조례 제5조 등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 개인의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교육적 소신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이 자신의 신념 또는 종교와 다르다고 해서, 이를 제외하고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담당하고 있는 역사 교과는, '과거에 있었던 다양한



인류의 삶을 이해하고, 현재 우리의 삶과 모습을 과거와 연관시켜 살펴봄으로써, 인간과 그 삶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와 안목을 키우는 과목<sup>1)</sup>이다. 그런 이유로, 역사 교과서의 내용에는, 진화론을 바탕으로 인간이 진화하여 오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였고, 그러한 도구들의 변화가 문명을 형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떻게 문명은 국가를 형성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하지만, 위 인정사실 다)항에서 보았듯이, 피신청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역사 교과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배우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와 위 학교 ○학년 ○반부터 ○반까지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소결

1) 종교와 관련하여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해야 하는 학교의 특성과 성장기의 학생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위와 같은 행위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해 신분상 처분으로서 중징계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사회과 교육과정” 中

2) 또한, 학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종교를 가진 교사의 행위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종교의 자유 및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 ]중학교장에 대한 신분상처분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종교를 가진 교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사 개인의 자유와 학생들의 자유 및 권리를 구별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감 및 [ ]중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30.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 [별지] 관련 규정

###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0조(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나.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4조(교원)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